

주간 통일정세

2015-48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한미일 6자수석 회동 계획에 “반공화국 핵소동” 비난(1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반공화국 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며칠 후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공공이판을 벌리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소동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용납 못할 매국반역 책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뻔뻔스럽게 북핵위협의 간판을 내걸고 외세와 공모결탁해 반공화국 핵소동에 열을 올릴수록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도 격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핵소동은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을 버려야 하며 반공화국 핵소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함.
- 북한, 당국회담 앞두고 비난공세…“관계개선 의지 보여라”(11/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대화 분위기에 과연 어울리는가’라는 논평에서 우리 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전술훈련에 대해 “북남 관계개선을 어떻게 해서나 차단해보려는 군부 패거리들의 고약한 흥심의 발로”라고 보도함.
 - 그러면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날(26일)에도 대화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대결적 망언들을 쫓아내고(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겨레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하였고, “남조선 집권 세력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북침 전쟁소동을 걷어치우고 말끝마다 외우는 ‘관계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북, 당국회담 앞두고 “체제대결 종지부 찍어야” 압박(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정세론 해설에서 “체제대결을 종식시키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 조건”이라면서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한 체제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체제대결 책동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그 무엇을 얻어 보려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라며 “체제대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 사이에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 반역행위로, 종당에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몰아오게 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오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북남 당국회담이 열리게 된다”면서 “이것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함.

- 北, 당국회담 앞두고 “南 대결관념 버려야” 또 압박(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대결의 자세와 입장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 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북남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상대방의 성의를 색안경을 끼고 대하거나 이리저리한 부당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북남 대화는 또 하나의 대결마당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38노스 “풍계리에 새 터널 굴착”…추가 핵실험 준비 가능성(12/3, 38노스)
 - 38노스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에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힘.

- 매체는 “당장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으나 새로운 터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행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에 굴착된 새로운 터널은 풍계리 핵실험장 내 주요 지원시설의 북서쪽에 위치한 새로운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무산산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매체는 지난 4월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구조물이 은폐돼있었고 인근 하천을 따라 건설자재들이 놓여있었다고 밝힌 데 반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새로운 구조물이 공개된 가운데 자갈 등 상당규모의 부스러기가 놓여있고 건설자재들은 모두 치워져있다고 설명하면서 “건축자재들이 터널굴착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당국회담 앞두고 ‘금강산 관광’ 부각(12/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 겨레의 소원을 헤아려'란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정 회장의 금강산관광 개발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남녘 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민족의 화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었다”고 주장함.
 - 이어 “김 국방위원장은 당시 금강산관광을 승인했을 때 북과 남에 두 제도가 존재하는 기초 위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쪽에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함.
 - 통일신보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을 위해 공화국(북한)은 바닷길에 이어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에까지 길을 열어주는 등 최대의 성의를 발휘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보수세력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구실로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느니 하며 관광재개에 계속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종교계 남북교류 내년 더 활발해진다…이번주 사전접촉(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보도를 통해 종교계 각 종단이 지난 11월 9~1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종교인평화대회의’ 후속 조치로서 이번 주 개성에서 사전접촉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뉴스는 단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포함해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회 주교, 조환길 대주교, 이기현 주교 등 17명으로 구성된 천주교 사제단이 1~4일 나흘간 북한을 방문하며, 이들은 1일 오전 9시20분에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뒤 평양을 비롯해 양측 교류가 가능한 지역들을 둘러보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이에 한국천주교 관계자는 “장충성당이 낡아 비가 새는 등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측에서 재정지원을 비롯해 도울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中 다롄서 개최(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통일부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발표를 통해 남과 북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들이 오는 7~13일간 중국 다롄에서 편찬회의를 열어 겨레말큰사전 집필원고 중 2만여 개 단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뉴스는 이번 회의에 언어학자를 포함한 남측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관계자 23명이 참석하며, ‘남북 겨레말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임.

■ 북한, ‘겨레말큰사전 남북회의’ 앞두고 “민족어 지켜야”(12/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4면의 관련 기사에서 “우리의 우수한 민족어를 지키고 적극 살려 쓰는 것은 조선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이라며 이렇게 밝힘.
- 신문은 “단일민족의 상징인 우리 말이 남조선(남한)에서 외래어에 의해 잠식당하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우리 말이 지금처럼 남조선에서 계속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민족의 동질성을 지키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남조선에서의 외래어 사용 범람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남한 당국의 ‘反北 핵소동(대통령, ‘북핵 국제공조’ 발언·韓美日 6자 수석회담 계획)’을 비난하며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11.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가보안법’ 제정 67주년을 맞아 ‘정권안보와 독재통치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온 파쇼악법’이라며 ‘독재통치를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12.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北인권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관련 ‘北인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北)를 기어이 압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12.1, 중앙통신·민주조선)
- 【「직총」 중앙위 대변인 담화(12.2)】 경찰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과 새누리당의 ‘복면시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용납 못할 파쇼적 폭거’라며 ‘파쇼폭압으로 얻을 것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고 비난(12.2, 중앙통신)
- 경찰의 ‘민중총궐기 집회’(11.14) 진압에 대해 ‘진보 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불순한 흉계의 발로’라며 ‘남조선 당국이 계속 반역정책과 파쇼탄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것’이라고 비난(12.2,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12.3), 남한 정부의 “파쇼탄압(경찰의 ‘민중총 궐기 집회’ 수사 등)으로 남조선은 인권불모지, 인권탄압지대”라며 ‘反정부 투쟁’ 선동(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한 공군의 ‘비상활주로 항공기 이착륙 훈련’ 실시(12.1, 경남 창녕)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북침 선제공격훈련’이라고 비난(12.3, 중앙통신)
- 남북관계 관련 ‘체제대결은 남북 사이에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 반역행위’라며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노력에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요구 및 ‘태도 여하에 따라 관계 개선의 길이 있다’고 주장(12.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남한 당국자들의 대결관념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방해요인 이었다’며 남한 당국의 ‘反北 대결관념을 버리고 당국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나설 것’ 요구(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북핵 국제공조’ 강조(대통령,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등)에 대해 “쓸데없는 놀음”이라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만 멀어지고 대결과 긴장만 고조되게 될 뿐, 우리(北)의 결심과 의지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對韓 THAAD 배치 필요성 등 정당화(11.25, 주한미군 사령관 등)는 “저들의 패권적 야망을 감추고 주변 대국들의 불만과 반발을 묵살시키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12.6,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미국, 평화협정체결 위한 대화에 응해야”(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외무성 대변인이 3일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문제의 발생 근원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 수 있다”며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대화에 속히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북미가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무장 해제해야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뒤섞어 놓으면 어느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진리”라고 덧붙임.
- 또한 대변인은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돼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아직도 사방을 돌아다니며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테러·시리아 사태 책임 미국에 있다” 주장(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증에 휩싸여 있다”며 “이슬람교국가(IS)를 조작해내고 중동지역을 그들이 마음대로 살판치는 테러의 난무장으로 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최근 프랑스 파리과 말리에서 벌어진 테러, 러시아 여객기와 전폭기 격추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민족간, 종교간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은 “국제적인 반테러 협력 분위기를 깨버리고 저들의 중동지배 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의 산물”이라며 “시리아를 둘러싼 정세악화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우리는 테러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용하려는 시도들을 배격한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日 우주기본계획·위성발사’ 비난…“위험천만 망동”(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우주에까지 뻗쳐오르는 재침 광기’란 논평에서 일본이 올해 초에 결정한 우주기본계획은 “우주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는 책동”이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성토했다.

- 신문은 이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는 것은 도발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우주기본계획을 통한) 일본 반동들의 정탐위성 증가 높음은 재침 준비의 완료 단계”라고 비판함.
- 또한 일본이 지난달 상업용 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주에 침략적 군사위성을 마구 쏘아 올리면서도 우리의 평화적 우주 개발을 시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런 시비질은 일본이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활동을 위협으로 매도하고 우주로의 군사적 진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북한)이 평화적 우주 개발의 일환으로 1998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했을 때 일본은 그 무슨 ‘미사일 발사’니, ‘위협’이니 하며 못되게 놀아냈으며, 송금과 수출 제한 등 대조선(북한) 단독 제재를 강화해 우리에게 악랄하게 도전했다”고 밝히고 “세계는 일본의 재침 책동이 몰아올 파국적 후과(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무분별하게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인권문제 거론, 미국의 주요 침략수법” 주장(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제도 전복을 노린 위험천만한 인권 모략소동’이란 정세론 해설에서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은 ‘인권 허물’을 들추어내 비방 중상하며 그것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하며, “그 대상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나라들, 대미 추종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이라며 실례로 파나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을 언급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공화국(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엔에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으로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 안보리 10일 북한 인권상황 논의…지난해 이어 두 번째(12/4,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와 관련 뉴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 유엔총회를 통과된 직후인 12월 22일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북 군사청년 대표단 잇단 베트남행(12/1, 자유아시아방송, VNA통신)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베트남 국영 VNA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의 청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이 베트남 공산당 간부들과 만나 양국 청년단체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함.
- 통신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전날 하노이에서 하 티 키엣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나 호치민공산주의 청년연합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당시 면담에서 군사 분야뿐 아니라 학생 어학연수와 박물관 및 도서관 등 문화, 스포츠 분야 교류도 강화하기로 합의함.

- 김철남 싱가포르 주재 北 대사, 11월 26일 주재국 대통령(토니 탄)에게 신임장 전달(11.30, 중앙통신)
- 北 적십자회 대표단(단장: 백용호 집행부위원장), 11월 30일 적십자 국제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차 평양 출발(11.30, 중앙통신)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제도전복의 도구, 세계제패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세계도처에서 정치군사적 개입의 폭을 넓혀나가려 한다'고 비난하며 '대조선 인권소동의 파탄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12.1, 중앙통신)
- 리수용 외무상, 루마니아 국경절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12.1, 중앙통 신·중앙방송)
- 北 군사대표단(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 12월 1일 라오스와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마치고 귀환(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새 세대 일꾼대표단(단장: 정희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 부위원장), 12월 1일 평양 출발(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일 라오스 창건 40주년에 즈음하여 同國대통령(총말리 사야손)에게 축전(12.2,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리수용(외무상), 라오스 총리·외무상에게 축전(12.2,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임 주북 영국 대사(마이클 존 기포드)와 담화(12.2,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대표단(단장 :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11월 24일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9차 회의(영국 런던)에서 '공화국은 앞으로도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12.3, 중앙통신)
- '제2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진행하고 '北-美 평화협정체결 촉구 선언문' 채택(12.2, 중앙통신)
-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국제화·정치화 등 反北 인권모략 소동'은 "조선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군사적 힘으로 말살하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쟁억제력 더욱 강화 입장 不變' 강조(12.3, 중앙통신·노동신문)
- 베트남 방문 중인 北 최고경찰소 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12월 2일 베트남 주석(쯔엉 썬 상) 면담(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전용남 위원장), 12월 3일 라오스·베트남 방문 후 귀환(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 학생소년 예술단(단장: 신길웅 도교 조선중고급학교 교장), 12월 3일 평양 도착(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용학 駐네팔 북한 대사, 同國 대통령 예방하여 '김정은 인사' 전달(12.4, 중앙방송)
-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첨예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범죄적 결탁'이라며 '핵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 핵전파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12.5,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5일 태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부미볼 아둘리아데지)에게 축전(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과 일행, 12월 5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고위급회의'(프랑스 파리) 참가 차 평양 출발(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안동춘 부의장), 12월 5일 '아시아의회 회의 제8차 총회'(캄보디아) 참가 차 평양 출발(12.5,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동화세계 같다”(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며 흡족해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화강석과 고급 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 자태가 품위 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며 “마치 동화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다”고 평가하였음을 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우리 학생 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라며 “오늘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후 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당에서는 천만 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임.
 - 통신에 따르면 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로켓 ‘은하3호’의 모형이 설치된 과학홀, 서예와 가야금, 성악 등을 배울 수 있는 예능동,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수영장 등 체육 시설, 야외 자동차 운전실습장 등이 들어섰으며, 이번 시찰에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리일환 당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수행함.

- 北유명 축구해설가 리동규 사망…김정은 조의(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유명 축구해설가인 리동규 체육과학원 부원장이 79세로 사망했다고 3일 보도했으며, 구체적인 사망일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교수 박사인 체육과학원 부원장 리동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3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10월 김정은 시찰 앞두고 갈마비행장에 폭발물”(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방송은 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6일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튿날인 7일로 예정됐던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함.
 - 방송은 “폭발물은 갈마비행장 내 안내소 천장에서 발견됐으며, 광산의 갱도 굴착에 사용하는 200g의 폭발물 100개가 든 폭약 상자였다”며 “폭발물은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앞두고 국가안전보위부가 현장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전함.
 - 이후 보위부가 폭발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으며 수사를 진행하는 보위부의 현장 보존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비행장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은 제4차 포병대회 참석…“형식주의가 최대 금물”(1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 제4차 포병대회에 참석해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경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인민군의 각급 포병부대,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지휘관, 정치 일꾼들과 군사학교 일꾼들이 모인 포병대회 연설을 통해 “포병 무력은 인민군대의 화력타격의 기본 역량”이라며 “포병 부대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 격식화, 멋따기(멋 부리기)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모든 포병 부대와 구분대들이 경상적인(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전투동원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적들이 우리(북한)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0.001 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에 멸적의 포화를 들썩워야 한다”고 주장함.
 - 이날 행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 수행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제4차 포병대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정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주석단에서 같은 열에 앉은 모습을 보도하였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박정천(파란색 동그라미) 화력지휘국장이 차례로 앉아있었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대북 소식통 “황병서, 신병 치료차 中 방문했었다”(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신병 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보도하면서, 이에 소식통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근 신병 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며 “신병 치료 이후 지금은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음을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황병서는 원래 척추가 안 좋아서 척추 수술을 받으려고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간부들은 행사 때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임.
 - 뉴스는 황 총정치국장이 ‘8·25 합의’ 때 우리 군이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제거한 공로로 최근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으로 추대된 점을 고려할 때 신병 치료를 마친 뒤에는 현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함.
- ‘신병치료’ 북한 황병서, 22일 만에 공개석상 등장(12/3,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122호 양묘장 현지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22일 동안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이번 시찰에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시찰에 황 총정치국장 외에 오수용 노동당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다고 전함.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이날 122호 양묘장의 묘목온실, 야외재배장, 비닐박막 온실재배장 등을 돌아본 뒤 “산림복구전투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10년 앞을 내다 봐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푸른 숲 우거진 조국산천의 내일을 생각하며 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가꿔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지금은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해 전진하는 지식경제시대”라며 “122호 양묘장을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화,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적인 양묘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리자”고 강조함.

- 北, 미사일부대 총괄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대장 승진(12/3, 조선중앙TV; 12/4,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군사교육 일꾼 대회’에 참석한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김 사령관이 별 4개가 달린 대장 견장을 달고 나온 모습을 내보냄.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김락겸은 지난해 2월 상장으로 승진했으나 이번에 1년 10개월 만에 대장으로 초고속 발탁됐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노동신문 “인공위성 100% 국산화” 억지주장 반박(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내 조국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한층 더 다져준 의의 깊은 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25~26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열린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세계를 둘러보면 우주에 자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만, 100% 국산화된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라며 지금까지 발사한 인공위성들이 100% 북한제 부품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가장 극악한 제재 속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전 속에서 가장 엄혹한 강추위와 눈 속에서 위성발사를 성공한 실례를 아마 인류는 찾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 “최첨단 과학기술과 경제력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구위성과 운반로켓 제작, 정확한 궤도 진입 등을 통해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얼마만한 높이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별지도(星圖), '공중제비'(tumbling) 기술 등이 북한의 우주개발 능력을 입증한다고 강조함.

- 이어 "100% 국산화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로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꽉 채워갈 만만한 포부와 야심이 자자구구마다 어려 있는 토론들을 듣노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 오르던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 장면들이 다시금 밝혀왔다"고 덧붙임.

- 「직총(조선직업총동맹)」 창립('45.11.30)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1월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오수용(黨 비서)·김덕훈(내각 부총리)과 제4차 전국 직맹모범초급단체위원장대회 참가자 등 참석(11.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창립('45.12.1)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30일 진행(11.30, 중앙통신)
- 오늘 동해의 물고기대풍은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인민군대의 결사옹위·결사 관철정신의 분출'이라며 사회의 수산부문 일꾼들은 '인민군대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높은 물고기 잡이 성과로 黨 제7차 대회를 맞이할 것' 독려(11.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3일 故 리동규(체육과학원 부원장) 빈소에 조화 전달(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 12월 3일 '黨 제7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궐기모임 진행 및 박태덕(황해북도 黨 책임비서)·임훈(황해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석(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내각, 12월 4일 2015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을 위해 육류관에서 연회 마련(12.4,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일성父의 모자이크 벽화와 동상, 나선시·평안남도·황해북도 등 수많은 단위들에 건립(12.4,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만수대창작사·중앙미술창작사·평양미술대학, 黨 제7차 대회에 즈음한 선전화들 새로 창작(12.4,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협동농장 개혁 나서나... '관리기구 비효율' 잇단 지적(경제연구, 10/30; 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일 입수한 '경제연구' 2015년 4호(10월30일 발행)에 수록된 '현시 기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차'라는

글에서 북한 당국이 농업 경영의 자율화·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 글이 “협동농장 관리운영에서 농업근로자대중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의사와 요구,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창발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생산경영 활동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적 방법을 완성해야 하고 구체적 실정을 잘 아는 농민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기업관리 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음을 밝힘.

나. 주요 조치

- “北이 앙코르와트 옆에 지은 박물관, 다음달 4일 개관”(11/30, NK뉴스)
 - NK뉴스는 캄보디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캄보디아의 유명 사원인 앙코르와트 근처에 북한이 건립한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이 다음 달 4일 개관 예정”이라고 30일 보도함.
 - 뉴스는 공사비 1천만 달러(한화 약 115억9천만 원)를 들여 세운 이 박물관이 앙코르와트에서 3km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길이 120m의 초대형 파노라마 모자이크 그림과 부처의 대형 초상화 등이 전시된다고 전함.
 - 그러면서 뉴스는 2011년에 착공된 이 박물관이 본래 2013년 4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매표소를 박물관 옆으로 옮겨달라고 한 북한의 요구를 캄보디아가 반대해 오면서 개관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함.
- 북, 서해바다 어업권 중국에 팔아(11/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산둥성(산둥성)의 한 대북소식통이 “평안북도 철산군과 염주군, 선천군 일대의 수산 기지들에서 어장을 빌려주겠다는 제의가 연방 오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한 수산물 수출회사는 바스레기(바지락)가 많이 나는 보산리 앞바다의 일부 구역을 떼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는 30일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 측이 내민 계약조건에 따르면 어장 넓이는 55정보로 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위도와 경도도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면서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어업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하였고, 이 어장은 원래 북한 수산사업소 소관이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름과 어구 부족으로 저들이 잡지 못하게 되자 중국에 넘기고 대신 매달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수역은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 군대를 끼지 않고서는 중국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군대가 가운데서 중국측과의 흥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중국 어선들은 북한수역에 들어가 마음대로 조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중국배들은 쌍끌이 그물로 바닥을 훑기 때문에 조개 씨를 말리게 된다”고 덧붙임.

■ 北, 내년 당대회 앞두고 또 ‘속도전’…“통치자금 목적”(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방직공장의 정방공 150명이 연간계획을, 15명이 2년분 계획을 완수한 것을 비롯해 각지에서 계획 완수자들의 대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한 달 정도 걸려야 할 백두산영웅청년3호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선행 설비 생산을 10여 일 동안에 제작하는 성과가 이룩됐다”고 전함.
- 통신은 “7차 당 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조선 인민의 사상·정신적 품모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고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어로전투’ 연일 강조…“식량난 수산물로 보충”(12/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4일 4면에 ‘백두의 칼바람에 만선기 펄펄 휘날려가리’, ‘동해 어장으로 달리는 애국의 마음들’, ‘어로 전사들의 심장의 맥동을 더해 주며’라는 제목의 기사를 4개나 실었으며, 조선중앙통신도 4일 ‘조선(북한) 동해어장에서 겨울철 물고기잡이를 위한 어로전 전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냄.
- 매체는 기사에서 “백두의 칼바람에 투쟁의 뜻을 단 이들은 날바다와 싸우며 어장 마다 치열한 돌격전을 벌임으로써 연간 물고기잡이 계획을 기한 전에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북, 내년 달력 중국서 인쇄(12/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변경도시의 무역회사 간부소식통을 인용하여 “내년도 북한달력이 12월 중순은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예년에 비해 새해 달력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전기사정이 여의치 못해 내부에서 인쇄를 하다가 중지하고 뒤늦게 중국의 인쇄 공장에 맡겼기 때문”이며, “이 같은 (북한내부) 사정 때문에 내년도 달력은 이달 중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북한 대방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소식통은 “목란 비디오에서 제작하는 영상물 CD 알판도 중국에 의뢰해서 제작해 들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도 역시 북한의 열악한 전기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 “수도인 평양의 중심지역도 하루 잘해야 3시간 정도, 변두리 지역은 1~2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전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양수기를 돌릴 수 없어 수돗물도 지역마다 교대로 제한공급하고 있다”고 전함.

- 북 ‘희천 1호발전소’ 전기생산 없어(12/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최근 평양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여 “당창건 70돌이 되는 10월 10일에 희천 1호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조명용으로 공급된다고 간부들이 큰 소리 쳤는데, 또 빈소리가 되었다”면서 “평양 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주변구역에는 다른 발전소에서 제공되는 전기가 하루 3시간 정도 오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인민군대 수만 명을 동원해 겨우 완성한 희천 1호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면서, “군사시설이 빼곡히 들어선 용림지구엔 언제가 건설된 것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WFP “11월 북 65만 명 식량지원”(11/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다미안 킨 아시아지역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여 WFP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65만 4천 여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보도함.

- 킨 대변인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180만 명에 월평균 1만 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2013년 7월부터 올해까지 북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규모이지만 국제사회의 모금 부족으로 지원 대상 세 명에 한 명꼴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의 9개 도 중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평가된 82개 군에 우선 지원했다고 설명함.
- 방송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인도주의 식량지원이 지난 7월 3천231톤 그리고 8월 3천785톤을 정점으로 지난 9월 2천105톤, 지난 10월 1천920톤, 그리고 11월 1천 820톤으로 세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모두 2만 2천220톤 규모라고 전함.
- “북한, 올해 중국서 수입한 곡물량 작년 보다 71% 감소”(1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의 양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보도함.
 - 방송은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1~10월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쌀, 두류 등의 곡물량은 4만 2천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4천t)보다 71% 줄었다고 전함.
 - 이와 더불어, 방송은 이 기간 곡물 수입액이 2천 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으며,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5만 4천646t)보다 41% 감소한 3만 2천315t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같은 수입량 감소에도 북한의 곡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북한-태국 올해 무역 28% 감소”(12/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3일 코트라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태국 간 무역 금액이 6천 276만달러(730억여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 770만달러(1천 20억여 원)보다 28.4% 줄었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는 고무를 중심으로 한 태국의 북한 수출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며, 올해 들어 9개월간 태국의 북한 수출은 5천 697만달러(662억여 원)로 작년 같은 기간 7천 815만달러(909억여 원)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태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목은 고무와 과일류, 철광 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금속제품, 섬유류였는데 2015년 올해 태국의 대북 수입은 39% 가량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식량농업기구, 북한 '식량부족국가' 지정(12/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란 제목의 올해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33개국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곡물량 36만 가운데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14만 2천에 불과해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도함.
 - FAO는 "북한은 올해 초 가뭄으로 봄 작황이 줄었고 여름의 홍수로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농지가 물에 잠겼다"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설명하였고,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 26개국과 미얀마,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국가 7곳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되었다고 전함.

- 영어행사 "내년 10월 평양서 국제아마추어 골프대회"(12/4, 연합뉴스)
 - 영국의 루핀여행사는 4일 인터넷 웹사이트(www.northkoreanopen.com)를 통해 "2016년 북한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다"며 "대회는 첫날 참가 선수들이 연습하고, 둘째 날에 정해진 라운드의 스코어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남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고, 대회 참가비는 1천159달러(134만원)이라고 이 여행사는 설명했다는 뉴스를 전함.

- 평양시에서 올해 150여개의 침전지 개건보수 등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11.30, 중앙통신)
- 평안남도 봉천탄광에 중거리 벨트콘베아 수송선 새로 건설 운영 및 '석탄 생산능력 1.5배 증가' 선전(11.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 효능 높은 '가금병 예방약들'(백신) 개발 선전(12.2, 중앙통신)
-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연간 석탄 생산계획 완수(12.2, 평양방송)
- 평안북도 여단 등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원들의 3호 발전소 건설 성과 및 수산부문 일꾼들의 11월 물고기잡이 계획 123.8% 초과 수행 선전(12.3, 중앙방송·노동신문)
- 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의 '수십개 대상 신축·증설, 개건공사로 모든 공정 자동화·무인화 및 생산 현장 무균화·무진화 실현' 등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어린이 식료품 생산기지로 전변" 선전(12.3, 중앙통신)
- 2015년 전국 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 12.2~4 평양에서 진행(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동해어장, 겨울철 물고기잡이를 위한 어로전을 전개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들을 잡고 있다고 선전(12.4, 중앙통신)
-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100.1%로 완수(12.4, 중앙통신)
- 자강도 임업관리국, 겨울철 통나무 생산계획을 106%로 수행(12.4, 중앙방송)
- 각지 4.15기술혁신돌격대, 6만 3,000여 건의 기술혁신안 연구 도입(12.5, 중앙통신)
- 평안북도 106% 등 전국 수산부문의 11월 30일까지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 103.7% 초과 수행” 선전(12.6,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환경 보장” 주장(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소속 리 광은 이날 유엔 지정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시종일관 장애자(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8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결성됐고, 2013년 수정·보충된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북한 내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이어 지난해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청각장애인축구팀의 호주 방문 및 친선경기 개최, ‘평양 장애자교류단’의 영국과 프랑스 순회 공연 등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성과로 열거하며 “장애자 직업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장애자들이 취미와 희망에 따라 이발과 미용, 피복, 식료가공, 목공 작업 등 노동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면서 “2013년 평양 시에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건립돼)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시장 관련

- “北주민, 겨울철 딸기·오이 하우스 재배로 수천달러 수익”(11/3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30일 평안남도 소식통이 인터뷰를 통해 “겨울철을 맞아 텃밭 온실(비닐 하우스)에서 남새(채소),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이 달러를 제법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겨울철 싱싱한 오이, 딸기는 돈주들에게 판매되는데, 특히 평양시 돈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돼 보통 겨울 한철 2천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특히 소식통은 “겨울철 온실 온도는 석탄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광지역 주민들이 주로 한다. 이들은 평양시장과 연계하여 딸기, 오이 등의 남새와 과일을 직접 도소매한다”면서 “현재 딸기 1kg 도매 가격은 북한돈 1만 5천원(쌀 3kg 가격)인데, 설날이나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이면 가격이 두 배로 올라 ‘재쑈(러시아 벌목공)보다 더 좋은 외화벌이’로 통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시장에서 다른 상품은 외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겨울철 싱싱한 딸기, 오이는 돈주들의 수요가 높아 현금 거래만 할 수 있다”면서 “평양시에 돈이 많은 돈주들이 늘면서 싱싱한 남새와 과일을 먹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2015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종합 4위(11/3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15 세계역도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으며, 남녀 각각 6명씩 총 12명이 출전한 가운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엄윤철 선수가 남자 56kg 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남자 62kg 급의 김은국, 77kg 급의 김광성, 여자 75kg 급의 림종심 선수가 은메달을 땀으며, 여자 63kg급의 최효심, 75kg 이상 급의 김국향 선수가 동메달을 보냈다고 덧붙임.

■ 양강도, 폭설로 행정기능 마비(12/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도 소재지인 혜산시에 25cm 가량의 눈이 왔다”며 “운흥군과 백암군 일대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교통, 통신이 모두 단절됐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갑자기 내린 폭설과 한파로 땅바닥은 발을 옮겨 딛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각 지역으로 연계된 전화망도 불통이어서 지역별로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각 인민반별로 주변의 도로와 철길에 내린 눈들을 쳐내고 있지만 워낙 내린 눈의 양이 많아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생계활동에 나서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12/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2일 열린 유네스코의 제10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김치담그기 풍습’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보도함.

- ‘세계 에이즈의 날’ 즈음 행사, 12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2월 1일 빙상관에서 진행(12.1, 중앙통신)
- 北 선수들(2015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참가, 金4·銀9·銅5), 12월 3일 귀환 및 김용진(내각부총리)·김수길(평양시黨책임비서)·김영훈(체육상)·최영남(인민봉사 총국장) 등 평양역 出迎(12.3, 중앙방송·중앙통신)
- ‘국제 장애자의 날(12.3)’ 기념모임, 12월 3일 강하국(보건상) 등 참석한 가운데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12.3, 중앙통신)
- 청년전위들의 총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11월 27일 평안북도 향산군 도착(12.5,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38노스 “풍계리에 새 터널 굴착”…추가 핵실험 준비 가능성(12/3, 연합뉴스)
 -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과거에 핵실험을 실시했거나 터널을 굴착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굴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38노스는 “당장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터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행할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이번에 굴착된 새로운 터널은 풍계리 핵실험장 내 주요 지원시설의 북서쪽에 위치한 새로운 부지에 위치해있으며, 인근 무산산과 연결돼있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 38노스는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실험이 행해지는 산이 이를 물리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지가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또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산의 암반이 약화되는 ‘산 피로 증후군(tired mountain syndrome)’을 북한 측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미·일 “SLBM 발사 등 북한 전략적 도발 억지”(12/4, 연합뉴스)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을 하고 “SLBM 시험발사 또는 위성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음.
 - 황 본부장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지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은 무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 추가적인 도발을 삼가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빗살틈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3국 수석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음.

나. 미·북 관계

- 美의회-정부 “재미 북한이산가족 조속 상봉” 한목소리로 촉구(12/1, 연합뉴스)
 -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 의회 친한파 모임 대표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 의원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돌드(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0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계 미국인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친지간의 조속한 상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음.
 - 지난 4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랭글 의원은 “아이들과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것, 또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들의 상봉을 위해 세계를,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 대화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가 현재 재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음.

- 미 국무부 “北 SLBM 발사시험 우려…긴장고조 행위 중단해야”(12/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다는 보도를 접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명백히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물론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이 북한 당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북한 제재 강화해야 할 때”(12/3, 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은 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규정하면서 김정은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이미 가해지는 금융제재는 중국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전략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주장했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면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美상원서 북한 등 고위험국 출신 망명·난민 승인 유예법 발의(12/3, 연합뉴스)
 -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의 한명인 랜드 폴(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른바 ‘고위험 국가(high-risk country)’에서 탈출한 외국인들의 망명 또는 난민지위 승인을 유예하는 내용의 ‘안보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시리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러시아 등 모두 35개국에 이른다. 법안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고위험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망명 또는 난민지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예하도록 했다.
 - 법안은 또 행정부로 하여금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신원조치를 강화하고, 이미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테러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미국 “북한 비핵화 약속 지켜라”…北 핵 실험장 굴착 ‘경고’(12/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한 사실이 포착됐다는 주장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보고서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무역 거점 단둥, IT 접목으로 변경무역에 ‘활력’(12/2, 연합뉴스)
 - 북·중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이 무역거래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 변경무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일 요녕일보(遼寧日報)에 따르면 단둥시는 알리바바 그룹, 텡윈 그룹 등 선두권 인터넷기업과 제휴, 상품 도소매, 창고 및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달 21일 단둥시 신개발지 내에 과학경제 전자상거래 서비스센터를 설립, 새로운 종합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면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음.
 - 호시무역구는 이밖에 대외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세금 환급, 주문서 용자 등 일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며, 단둥시는 연간 180만 명의 북·중 접경민들이 이 무역구를 이용할 것이라며 총 140억 위안(약 2조5천억 원) 규모의 무역거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정보수집위성 4→10기로 확대…北군사동향 파악능력 강화(12/3, 연합뉴스)
 - 3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우주정책위원회는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기를 운용 중인 정보 수집용 위성을 10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새로운 위성 개발을 시작하고 광학 위성 1기를 조기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촬영한 화상을 지구에 즉시 보내는 중계위성도 개발, 발사해 신속 대응하는 능력이나 감시 기능 강화를 측면 지원할 계획임.
 - 일본의 위성은 재해 발생 시 정보 수집은 물론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하거나 중국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도 사용될 것으로 보임. 위원회는 우주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하는 공정표 개정에 이런 구상을 반영하도록 최종안에 명시할 계획이며 머지않아 열리는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회의에서 정보 위성 확충 계획이 정식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마. 러·북 관계

- 러시아-북한, 전력산업 협력 잠정 합의(12/1,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과 전력산업 협력에 잠정 합의했음.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을 게재했음.
 -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기술 교류, 에너지 공급,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뉴스가 전했다.

바. 기타

- 오준 대사 “북핵문제 해결하려면 남북통일 필요”(12/2, 연합뉴스)
 -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일(현지시간) 저녁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욕대학교 한국인 학생회 공동 주최로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통일워크숍 강연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 대사는 “경제적 번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통일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냉전을 완전하게 끝내고, 북한 핵·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음.
 - 그는 이어 남북통일은 특정한 한 분야에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적어도 6개 분야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6개 분야로는 ▲민족 동질성 회복 ▲이념전쟁 종식 ▲서로 다른 체제의 융합 ▲핵무기로 표현되는 대량파괴무기(WMD) 해결 ▲경제 발전 ▲인권 등을 꼽았음.
- 유엔 안보리 10일 북한 인권상황 논의…지난해 이어 두 번째(12/5,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1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논의할 계획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고 한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서맨사 과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지속되는 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안보리가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의 주요 의제로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중국의 반대 시 안보리가 ‘절차적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한·중 관계

- 제1차 韓中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 개최(11/30, 연합뉴스)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과 가오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음.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운영과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또 양자 간 교역 및 투자의 획기적 증대라는 목표 아래 지방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창업·혁신형 기업의 상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제2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임.
-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연내 발효될 듯(11/30, 연합뉴스)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음.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임.

-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됨.

■ 추귀홍 中대사 “한·중 관계, 정치·경제·인문 3高 시대”(12/3,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3일 한·중 관계에 대해 정치적 신뢰, 경제 협력, 인문교류 등 “3고(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음. 추 대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 중한관계 발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추 대사는 “양국 간에는 밀접한 고위층 교류가 이어지고 전 방위적 전략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경제협력에서도 질적 향상이 있었다.”면서 최근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경제무역의 질적·양적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도 축사에서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님의 방중을 통해 한·중관계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의 발전 추진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하면서 한반도 정세 발전과 관련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평가했음.

- ‘중에 도망가도 잡힌다.’…韓中, 도피범 2년 새 18명 교환(12/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치안 당국이 상대국에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붙잡아 보내주는 ‘맞교환’ 공조 체제를 가동,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음.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2013년 6월 한중경찰협력회의에서 이러한 공조에 합의하고, 같은 해 말 1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음.
 -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1명을 잡아주면, 중국도 그에 맞춰 1명을 잡아주는 식”이라며 “우리가 열심히 중국인 사범을 잡아주면 중국도 그에 맞춰 검거에 나서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느낌도 있다.”고 전했다.
 -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 공안과의 공조도 더 잘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붙잡힐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日외무상 ‘위안부문제 타결, 올해 안에 어렵다.’ 시사(12/2, 연합뉴스)
 - 기시다 외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치한 것은 협의를 가속한다는 것뿐이다. ‘연내에’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언급했음.
 - 기시다 외무상은 2일자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일치한 것을 토대로 노력해야 하지만 아직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며, 자신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직접 교섭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 “외교장관 수준은 물론이며 그 이외에도 여러 수준에서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본이 1990년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후속 활동을 확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여러 관계자로부터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본·한국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응했으며, 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역시 해결 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음.

- ‘위안부 보상’ 日아시아기금 前이사 “기금, 공적활동이었다.”(12/2, 연합뉴스)
 -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 및 이사를 지낸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메이지대 교수(국제법학자)는 한·일 기자 교류 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을 지난달 30일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자택에서 만나 “아시아여성기금은 공적(公的) 국민이 정부와 같이 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그런 기본적 사실이 한국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오누마 교수는 “20년 전에는 일본 국민 여론도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보상도 하지는 여론이 많았다.”며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한국에서 전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고 말했으며, 그는 이어 “아무리 우리가 사죄해도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우파들의 주장이 점점 넓어지는 안타까운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오누마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일정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에 집착하고 있으면 한·일 관계도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 “연간 관광교류 200만 명 늘리자”…700만 명 목표(12/2,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현재 연간 500만 명 수준인 상호 교류 인원을 70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3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30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 협의회에서 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일 관계 등에 영향 받지 않고 관광교류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을 계획임. 또 양국 간 지방 관광 교류를 늘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에 협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며, 또 외래 관광객 유치 정책, 올림픽 등 대형 체육행사에 따른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임. 올해도 양국 교류 인원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음.

- “27세 한국男, 폭발음 전달도 야스쿠니 CCTV에…사전답사가능성”(12/4,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경시청公安부가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대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30일 한국인 남성이 머물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호텔 객실을 수색했다고 4일 보도했음. 아사히신문은 경찰이 신사 인근의 폐쇄회로

-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했고 남성이 머문 호텔의 숙박객 명부 정보를 토대로 그가 27세 한국인임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 아사히는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1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입국했으며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날인 23일 오후 같은 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떠났다고 출입국 기록 내용을 전했다.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23일 폭발음이 발생하기 직전에 야스쿠니신사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한국인 남성이 그 전날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4일 보도했음.
 - 남성은 지난달 22일에도 야스쿠니신사의 CCTV에 포착됐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시청公安부는 그가 현장을 사전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라. 한·러 관계

- 차대통령 “비핵화대화 재개”…푸틴 “북핵 해결 함께 노력”(12/1, 연합뉴스)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파리 현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음.
 -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유일한 비핵화 과제인 북핵 문제를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갖고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음.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 원칙하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음.
 - 또한, 두 정상은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보다 호혜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 양국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마. 미·중 관계

- 오바마-시진핑 ‘기후변화 협력’ 재확인…“한반도 비핵화” 강조(12/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성공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음.
 - 파리 총회에 참석 중인 두 정상은 이날 별도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번 총회에서 야심차고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으며, 두 정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담은 지난해 11월 기후변화 공동선언과 지난 9월 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음.
 - 두 정상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란과 주요6개국(P5+1)이 아라크에 위치한 중수로연구 원자로 전환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했으며, 극단주의적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의미하는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을 지지하고 역내 인도주의적 고통을 줄이는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음.

- <위안화 기축통화> 中-美 경제패권 경쟁 뜨거워진다(12/1, 연합뉴스)
 - 30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패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이후 지난 10월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협상을 타결해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 공동체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TPP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음. 이런 가운데 위안화의 SDR 편입을 통한 국제화는 금융굴기를 위한 중국의 핵심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위안화가 5번째 기축통화로 들어가면 중국은 자국 화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저변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각국이 보유한 위안화 자산이 외화보유액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제 결제 수단과 준비 통화로서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많은 전문가는 위안화의 기축통화 부상에도, 달러 중심의 통화 체제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지만, 당분간은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위안화와 유로화 등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중국 외환시장은 아직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데다가, 역내-역외 환율 간 괴리가 있는 점 등은 개선 과제로 꼽힘.
- 美-中, 사이버 범죄 대응 장관급 회담… 핫라인 설치 합의(12/2, 연합뉴스)
 - 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귀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에 합의했음.
 - 양국은 회담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해 미래 협력할 사건들의 범위를 정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으며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합의했음. 신문은 또 양국이 사이버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음.
 - 귀 공안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간 사이버 범죄 대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장관급 대화를 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주요 채널로 삼아 상대방 요청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미국 측은 사이버 테러와 상업적 기밀 절도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정보교환과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면서 이 대화채널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음.
- “인사관리처 해커 검거” 美-中 사이버 갈등 풀리나(12/3,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해킹 사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사이버 갈등’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 지에 관심이 쏠린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중국 당국이 붙잡았다는 용의자들이 OPM 해커라면, 이는 사상 최악의 미국 정부자료 해킹 사건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양국 간 신경전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의 첫 신뢰회복 조치가 될 수 있으나, 미국 관리들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실제로 OPM 해킹에 연루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 어쨌든 중국 정부는 체포된 용의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범죄자라면서 기소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통보했음.
 - 미국 정부의 한 관리의 “중국은 미국이 해킹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며 “미국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음.

- ‘남중국해 향해’ 美해군 “어디서든 국제법 따른 작전 계속”(12/4, 연합뉴스)
 - 주일 미 해군 대변인인 론 플랜더스 중령은 한·일 기자 교류차 일본을 찾은 한국 기자들을 지난 1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DDG 82) 함상에서 만나 최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를 향해한 것에 대해 “항행의 자유는 어떤 해군에게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해역에서든 국제법에 부합하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플랜더스 중령은 “미 해군이 서태평양, 남중국해, 지중해, 발트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누구도 놀랄 필요가 없다.”며 “전 세계에서 1년 365일 하는 작전”이라고 역설했음. 그는 “이는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하며 작전 하게 하고자 우리가 하는 일”이라며 “전 세계 모든 해군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 미·일 관계

- 美日 ‘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부 조기반환’ 발표...“日선거 의식”(12/4, 연합뉴스)
 -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縄)현에 있는 미군기지 부지 가운데 일부를 우선 반환한다고 미·일 양국 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주일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갈등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일본 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주일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오키나와현 내 토지 가운데 약 7ha를 2017년 중에 일본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발표했다.
 - 미국과 일본은 또 미군기지 ‘캠프 포스터’의 일부 구역을 기노완시가 미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음. 양국 정부가 토지 반환에 합의한 것은 후텐마 비행장을 옮기는 계획을 두고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대립이 격화하는 것이 내년 1월 기노완 시장 선거나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음.

- 아베 신조 정권은 현재 미군 기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반환한다는 합의를 발표해 미·일 양국 정부가 주민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사. 미·러 관계

- 오바마-푸틴 파리서 회동…‘시리아 해법’ 동상이몽?(12/1, 연합뉴스)
 - 30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했음. 양국 정상은 이날 파리 근교 르 부르제에서 열린 총회 계기에 약 30분간에 걸쳐 별도의 정상회담을 했음.
 - 양국 정상은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놓고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리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선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교환한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터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오바마, 푸틴에 “시리아 내전 수렁에 빠지고 싶은가” 경고(12/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비호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음.
 - 프랑스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생생히 떠올려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 시리아를 마비상태로 만든 내전의 수렁에 빠지는 게 기대하는 바가 아님을 푸틴 대통령이 알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 “몇 개월 뒤면 러시아의 계산이 바뀌어 이제는 시리아 내전을 끝낼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CNN은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혈 내전으로 빠져들어 감으로써 직면한 위험을 푸틴 대통령이 알고 있음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경고했다.”고 분석했음.
- 클린턴 “IS 퇴치 전에 전투부대 투입 반대…러시아와는 협력”(12/2, 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것에 반대했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의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이라크와 시리아에 지상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어떠한 상황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
 - 그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재고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IS 격퇴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음. 클린턴 전 장관은 “(지상군 투입이) IS를 추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상에 전투부대를 보낸다면 IS가 대원을 충원할 새로운 구실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 클린턴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 50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했지만 대규모 지상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데 부정적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

아. 중·일 관계

- 日정부 “위안화 SDR 편입 세계자본거래에 직접 영향 없어”(1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에 편입된데 대해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애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IMF 회원국 공적 주체가 보유한 것에 한정돼 있으며, 민간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거래가 대부분인 세계의 경제·자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위안화의 SDR바스켓 진입 의미를 축소 평가하려는 듯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결국 엔화의 상대적 영향력 쇠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日자위대, 中 공세 행보 속 동남아 국가와 방위협력 강화(12/1,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일부 국가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군대의 군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방위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특히 자위대의 동남아 국가 지원 사업은 최근 중국의 군비 확장 움직임이나 해양 진출 정책을 배경으로 한층 활발해지고 있음.
 - 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당사국은 물론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등의 군대에까지 지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이면 타국 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정부개발원조(ODA)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을 개정하는 등 외국 군대 지원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음.

- **“日정부, 731부대 中피해자유족 방일 비자 발급 거부”(1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 관련 민간 주최 행사에 참석하려던 일본군 731 부대 중국인 희생자 유족에 대해 방문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사설을 통해 소개했음.
 - 일본 시민단체와의 교류, 재판 등을 위해 몇 차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731부대 중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11월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처음으로 거부당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전쟁법(9월 개정된 안보법을 의미) 폐지를 요구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직시하고 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심포지엄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해 한·중·일 시민들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음.

- **중국 난징에 첫 위안부 기념관 개관…“일제 만행 고스란히”(12/2, 연합뉴스)**
 -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기념관이 처음으로 개관했음. 2일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소재 리지상(利濟巷) 위안소 유적지에서 전날 한·중 양국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했음.
 - 총 3천㎡ 규모로 세워진 기념관의 외벽과 전시실에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의미하는 ‘눈물 방울’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됐으며, 모두 1천600여점의 전시물, 400여장의 도면, 680장의 사진 등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증명해 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음.

- 중국 공산당·일본 여당, 6년 만에 교류행사 재개(12/3,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과 일본 여당 사이의 교류행사가 6년 만에 다시 시작됐음.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일여당교류협의회를 열었으며, 행사에는 왕자루이(王家瑞) 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 등이 참석했음.
 - 왕 전 부장은 역사 문제에 관해 “중국 인민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양문제에서 (일본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창끝이 중국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다니가키 간사장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노우에 간사장은 “관계 개선의 흐름이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음.
 - 양측은 동행한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4일에는 분과회의를 열어 경제, 무역, 사회보험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 中 서열 4위 위정성, 日총리 겨냥 “신중한 언행 중요” 직격탄(12/4,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4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비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 중인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일본 자민당 간사장,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일본 공명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일본의 항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지도자의 신중한 언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위 주석은 “중·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양국 국민감정은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악화한 채로 있다.”고 지적했으며, 양국이 서로 위협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관계를 회복하자고 촉구했음. 다니가키 간사장은 “일본의 해상교통로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음.
 - 이날 열린 중·일 여당교류협의회 폐막식에서 중국·일본 양측은 양국이 서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대화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무역, 환경,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여당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음. 다니가키 간사장은 6년 만에 성사된 일본 여당과 중국 공산당의 교류협의회가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음.

자. 중·러 관계

- 푸틴·시진핑 파리서 비공개 양자회담(11/30, 연합뉴스)
 -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개 양자 회담을 가졌음. 파리에서 이날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급격한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음.
 - 푸틴 대통령은 “세계의 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함께 만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 주석도 “우리가 다시 만난 지 보름 정도밖에 안됐는데 세계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을 동감한다.”고 말했음.

- 러시아·중국, 내년에 합작 뉴스통신사 설립 계획(12/2,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합작 뉴스통신사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하원 대언론관계 위원회 위원장 유리 슈발로프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러·중 포럼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이름을 딴 러·중 양국 전문가 모임인 ‘아무르 대화’를 설립하지는 제안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 슈발로프는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 중국 공산당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이 같은 제안이 러·중 매스미디어의 해인 내년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같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러·중 양국 관계는 질적 성장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상호 신뢰와 현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 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러·중 포럼에 참석한 통합 러시아당 의장 보리스 그리즐로프는 “합작 통신사 설립 목적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대중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론 다중이 참여하는 의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 3km 도로 신설’(12/2, 미국의소리)
 -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올소스 어널리시스’가 11월 30일, 북한 14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14호 관리소는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자가 약 1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200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이 관리소를 찍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14호 개천관리소는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관측된 시설물 등을 근거로 볼 때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 대부분이 수감자들이라고 분석했음.
 - 그러면서 이들은 농경지와 과수원, 가축들을 돌보고, 벌목과 목제품 제작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음.
 - 아울러 수감자들은 경공업 시설들과 광산에 파견돼 강제노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 이어 보고서는 14호 관리소 내에서 대규모 도로 보수와 건설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2013년 9월과 2014년 12월 사이에 3km 길이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됐고, 이 도로는 새로운 농업과 벌목 활동을 위한 접근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14호 관리소 수감 인원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 활동은 북한 당국이 관리소와 강제노동을 당하는 수감자들을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음.

- 북한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환경 보장” 주장(12/3, 연합뉴스)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12월 3일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소속 리 광은 이날 유엔 지정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시종일관

장애자(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1998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결성됐고, 2013년 수정·보충된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북한 내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이어 지난해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청각장애인축구팀의 호주 방문 및 친선경기 개최, ‘평양 장애자교류단’의 영국과 프랑스 순회 공연 등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성과로 열거했음.
- 그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이 이처럼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여성, 아동과 함께 장애인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꼽는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임.

■ 북한 “인권문제 거론, 미국의 주요 침략수법” 주장(12/3, 연합뉴스)

-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3일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주요한 침략 수법의 하나”라고 비판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도 전복을 노린 위험천만한 인권 모략소동’이란 정세론 해설에서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은 ‘인권 허물’을 들추어내 비방 중상하며 그것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밝혔음.
- 신문은 이어 “그 대상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나라들, 대미 추종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이라며 실례로 파나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을 꼽았음.
- 또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공화국(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엔에 제출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으로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그러면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FAO “북, 식량부족국 재지정”(12/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5년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올 초 가뭄으로 봄 작황이 줄었고 여름의 홍수로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농지가 물에 잠겼다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대부분의 북한 가정이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수입하거나 인도주의 국제지원으로 메워야 할 식량 부족량이 약 36만 톤에 이르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4만 2천 톤 확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북한 당국이 수입한 곡물은 약 12만 7천 톤으로 1년 전의 약 27만 톤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국제사회 지원도 약 1만5천400톤으로 1년 전의 7만 톤과 비교해 크게 줄었음.
 -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도정한 쌀 약 190만 톤, 옥수수 246만 톤 등으로 전년에 비해 약 18만 3천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기계와 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 제3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 7일부터 런던 개최(12/3, 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는 제3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오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음.
 -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7일 런던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개막식을 갖는 것으로 시작됨.
 - 이어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인권사진 전시회와 탈북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나를 위한 너, 너를 위한 나’ 공연, 북한인권 영화 ‘천국의 국경을 넘다’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 김주일 사무총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로 각국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가하는

- 대표자 회의를 끝냈으며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세력 결성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밖에 이번 행사 기간 중 영국 'BBC' 국제방송을 방문해 대북방송 개설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다.

■ 북, 불법 손전화 차단 대폭 강화(1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의 방해전파망 확충으로 접경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임.
- 과거에는 신의주나 혜산, 회령, 무산 같은 도시의 시내중심에서 몇 킬로만 벗어나면 중국 휴대폰을 이용한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시외지역에서도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변경 도시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국경지역 손전화 방해전파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어 북한 측 대방과의 소통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 북한당국이 국경지역에 손전화 방해전파로 천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전한 소식통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전파차단 벽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틈새지역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중국 휴대폰으로 북한 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 같다”고 전했다.
- 북한당국의 손전화 방해전파 확대는 강 건너 밀수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북한의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중국과의 손전화 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경밀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밀수를 통해 먹고사는 사람들이 직접 타격을 받겠지만 이들이 들여온 물건을 받아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북한인권

■ 폴란드 정부 “평양에 인권 문제 직접 제기”(12/1, 미국의소리)

- 지난 1989년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난 폴란드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회원국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 오면서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건설적인 정치대화야말로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게 폴란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음.
- 폴란드는 이런 원칙 아래 바르샤바와 평양에 있는 양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창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임.
- 폴란드는 그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져왔지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해 왔음.
- 특히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조짐 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강력 규탄한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줄곧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음.
- 따라서 폴란드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우려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례적임.
-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음.

■ 유럽연합 회원국 몰타 북 노동자 수 증가(12/4, 자유아시아방송)

- 폴란드와 함께 유럽연합 회원국 중 북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몰타가 울 들어 최소 10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증을 추가 발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 4일 몰타 현지에서 발행되는 일간 ‘몰타 투데이’에 따르면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루카 국제공항 인근 한 산업단지의 중국계 의료공장에 고용돼 일하고 있음.
- 몰타 노동청은 이 신문에 올 해 초 한 번에 10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정식 노동허가증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후 추가 발급은 없었다고 밝혔음.
- 신문은 이로써 11월 말 기준 41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당시 이 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수가 26명이었다고 전했다.
- 신문은 북한 노동자들이 2013년 이후 몰타 내 공장에 고용돼 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문제 등에 관해 몰타 당국에 질문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 유엔 안보리, 10일 북한인권 상황 논의(12/5, 미국의소리)
 -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12월 10일에 다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함.
 -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 한다고 밝혔음.
 - 앞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하가 체말리 대변인은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 이사국인 칠레와 프랑스,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9개 나라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음.
 - 미국은 12월 안보리 의장국임.
 -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파워 대사는 안보리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음.
 -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했음.
 - 안보리 의제는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당시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음.
 - 중국은 올해도 지난 1일 류제이 유엔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음.

3. 탈북자

- 뉴욕타임스, 탈북자 5명 자서전 서평 게재(12/1, 미국의소리)
 -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11월 29일 자 ‘서평란’에 탈북자들의 영문 자서전에 대한 서평을 실었음.
 - 지난 1989년 중국 텐안먼 사태에 관한 책 ‘기억상실 공화국’의 저자인 루이사 림 미시건대학 초빙교수가 ‘북한 탈출’이란 제목으로 쓴 이 서평은 탈북자들이

올해 잇따라 영문으로 출간한 다섯 권의 자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루이사 림 교수는 먼저 탈북자 김은선 씨가 쓴 ‘자유를 향한 1천 마일’에 대해, 김 씨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9년 간의 시련이 담긴 책이라고 소개했음.
 -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고, 운 좋게 다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후 고비사막을 넘어 몽골의 구치소에 갇혔다가 마침내 한국에 정착했다는 것임.
 - 림 교수는 별다른 은유 없는 단순한 문체 때문에 김 씨의 이야기가 갖는 힘이 약화됐으며, 이는 주민들의 상상력을 말살시키려는 북한 체제의 의도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싹한 증거라고 지적했음.
 - 이어 박연미 씨의 자서전 ‘살기 위하여’는 아버지가 밀수 혐의로 수감된 뒤 특권층으로 살던 어린 소녀의 삶이 어떻게 급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림 교수는 소개했음.
 - 중국으로 탈출한 박 씨는 어머니가 성폭행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중국인 인신매매범의 정부가 됐다가 인신매매에 직접 가담해 자신의 어머니마저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임.
 - 계속해서 루이사 림 교수는 이현서 씨의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매주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자아비판 때문에 심지어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는 이 씨의 말을 인용했음.
 - 림 교수는 ‘해와 달 사이의 별들’을 쓴 캐나다 정착 탈북자 루시아 장 씨에 대해서는 다른 탈북자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시달렸다고 소개했음.
 - 남편에게 학대 당한 결혼생활, 중국에서 당한 인신매매, 두 번의 체포와 강제복송 등, 중국과 몽골을 거쳐 캐나다에 정착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임.
 - 이밖에 림 교수는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로 미국에 정착한 조셉 김 씨의 자서전 ‘같은 하늘 아래’에 대해, ‘굶주림이 도덕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나타나 있다’고 평가했음.
- 영국 외교부 “강제복송 위기 탈북자 문제, 관련당국과 협의 중”(12/4, 미국의소리)
-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아널레이 부장관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복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9명 문제를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널레이 부장관은 2일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이냐는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음.
- 하지만 아널레이 부장관은 관련 당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음.
- 아널레이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영국-중국 인권대화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농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9 명의 탈북자들은 지난 10월 22일 베트남의 몽카이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추방해 중국 광시성 동싱의 공안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달 16일 다시 선양으로 옮겨진 뒤 곧바로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 성 투먼 변방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11월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당국이 이들의 신병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음.
- 미 국무부는 11월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송환 된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역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음.

4. 이산가족

- **美의회-정부 “재미 북한이산가족 조속 상봉” 한목소리로 촉구(12/1, 연합뉴스)**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과 정부의 고위 인사가 11월 30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친지 간의 조속한 상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음.
 -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 의회 친한파 모임 대표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돌드(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오후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음.
 - 지난 4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랭글 의원은 “아이들과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것, 또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들의 상봉을 위해 세계를,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 대화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가 현재 재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남북 차관급 회담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재미 이산가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미 이산가족 문제가 잘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 현재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미 상·하 양원에 이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임.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영 NGO, 북에 38만 달러 상당 텐트 지원(12/1, 자유아시아방송)
 - 쉘터 박스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홍수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들을 위한 구조 요청에 부응해, 이번 주 텐트 400개를 북한에 보낼 예정임.
 - 쉘터 박스는 이번 지원 총 예산은 미화로 38만 달러로 영국 정부를 비롯해 유럽 국가와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모금한 바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앤드류 애번스 국장은 12월 1일 이번 구호품이 올해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라선 지역에 집중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특히 그는 쉘터박스 직원 2명이 라선에 약 10일간 파견될 예정이라면서, 분배

-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추가 구호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 이 밖에도 이번 지원에서는 텐트 뿐만 아니라 난로 500개, 담요, 태양 전등, 물통 등 생필품이 들어간 쉘터 박스 구호상자 500개도 함께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 애번스 국장은 또 이번 12월 초의 지원 후에도 12월 말쯤 북한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구호품의 분배과정에는 대한적십자사도 함께 협력해 라선 지역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할 예정이다.
- 북, '긴급 구호' 수혜 아시아서 두 번째(12/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12월 2일 북한이 올해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 지원하는 '긴급대응지원금'(rapid response)을 미화로 63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 유엔은 올해 가뭄 등 엘니뇨 이상 기후로 북한의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총 60만톤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해 이티오피아, 미얀마, 말라위, 짐바브웨 등의 순으로 총 10개국에 '긴급대응지원금'을 7천 600만달러 지원했다고 전했다.
 - 특히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받은 금액은 지난해 전체 수혜국들에 지원된 '긴급대응지원금' 중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액수임.
 - 또, 중앙긴급구호기금은 '긴급대응지원금' 을 지원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가뭄'으로 4천 9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두 번째는 '홍수'로 1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여름 북한의 긴급한 지원 요청 직후 곧바로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기구들이 수해 복구 사업을 펼치도록 지원을 투입해 눈길을 끈 바 있음.

8. 북한동향

-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北인권법'을 정국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관련 '北인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北)를 기어이 압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12/1, 중앙통신·민주조선)

- 담화(12.3), 남한 정부의 “파쇼탄압(경찰의 ‘민중총궐기 집회’ 수사 등)으로 남조선은 인권 불모지, 인권탄압지대”라며 ‘反정부 투쟁’ 선동(1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국제화 정치화 등 反北 인권모략 소동은 “조선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군사적 힘으로 말살하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쟁억제력 더욱 강화 입장 不變’ 강조(12.3, 중앙통신·노동신문·제도전복을 노린 위험천만한 인권모략소동)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